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동포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이 선언은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부터 제 30조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동포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이 선언은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부터 제 30조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 5 부 유엔 세계인권대회 평가

A 평가서

1. 천주교 인권위원회 평가서

가. 세계인권대회의 교훈

1) 정부간회의에 대한 평가 : 기재출 "본회의 경과보고"(공대위 보고자료집) 참조

2) 비정부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

비정부단체들은 정부들의 활동에 비하면 초기부터 지역회의를 주도하고 비엔나대회에 대거 참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번 세계인권회의의 근본적 한계가 '정부가 심판대상이라는 점' 즉 인권문제가 다분히 정치적 사안으로 취급될 운명이었다는 점을 기준으로 되돌아 본다면, 넓은 의미의 비정부단체들과 그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만을 내리기는 힘들다. 즉, 실제활동상으로도 그렇고 나타난 결과를 보아도, 비정부단체들 일반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비정부단체들간의 활동상의 차이, 전략상의 차이를 평가하는 것은 훨씬 의미가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 항목은 추가 자료조사를 거친뒤에 가능할 것이다).

대략, 비정부단체들의 일반 공동활동은

- (1) 지역회의에서 있었던 즉각적 공동활동으로서 - 비정부단체 선언문 기초 및 대정부 압력행사
- (2) JPC의 무능과 비민주성에 대한 공동전선
- (3) 비정부단체들의 참여폭과 발언권을 높여려는 대정부 공동전선
- (4) 비정부단체들 행사의 활성화
- (5) 본회의시 정부들에 대한 로비활동 및 여론활동

(1)과 (5)는 공동의 전략이 없을 때 걸치레가 되기 쉬운 공동활동이며, (2)-(4)는 공동전략을 위한 전제 혹은 보조활동들이다. 따라서 실제 진행된 5가지 종류의 활동자체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그런 활동들이 어떤 공동의 목적아래 진행되었는가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정부단체들의 공동대응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 인권단체들의 사전 고감, 의사소통, 공동전략 모색의 부재

민간단체들의 경우, 3개의 각지역 민간단체선언문에 나와있는 내용에서 보이듯, 인권운동 일반(국제인권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일치가 존재하였으나, 유엔민주화 인권관 무관제 중국문제 난민문제 유고문제등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거나 교감할 기회가 없었다. 이 점은 남측 인권단체들의 예견이 짧았던 데에서 더 큰 문제로 되

었다. 기존의 인권운동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구미지역의 자유주의적 인권단체들의 경우 어떤 입장으로 나올 것인가를 대충 예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시아만 하더라도 어떤 인권단체도 '인권의 보편성' 문제 등 상투적인 쟁점 외에 인권운동 성격상의 차이에 대해 남측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제기하거나 제안하지 않았다.

- 인권단체들간의 세계정부(세계적 차원의 모든 의견수렴구조를 통칭하여)에 대한 고민 부족

세계회의전 국제조직이건 기실 민주적이라면 어떤 의사수렴구조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방콕회의의 분위기가 빈에서 민간단체들의 분위기는 절대다수결 또는 만장일치에 (낭만적으로) 의존하는 전체회의방식 중심이었다. 그러나 대규모의 전체회의는 소모적이라는 약점이 있고 때문에 섬세한 안전을 처리하지 못한다. 대규모 전체회의는 가시적인 반대행동에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로 빈에서도 그랬다 - 달라이 라마, 카터 전. 또 민간단체 공동선언문을 세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완전히 실패했다. 고로 이후의 로비활동상의 미흡함이 뒤따랐다. 비엔나이후의 대책(BEYOND VIENNA)이 진지하게 검토된 안이 현지에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연락기구설치로 결론내려진 것도 의사수렴구조에 대한 사전전략이 부족해서였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여러가지 부족했던 점의 배경에는 인권단체들의 분산성 비전문성 비국제성등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어쩔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비엔나대회에서 대다수의 인권단체들은 보다 많은 발언권, 비정부단체 공동의 대유엔 참여권 등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추상적인 "공통성"에 근거한 발언과 활동을 했다. 이는 희망 사항이자 지향이기도 할 것이다. 현실과 지향을 이어내는 것은 앞으로 세워야 할 합리적인 계획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비엔나대회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비정부단체들의 언행을 두고 '헛된 짓' 혹은 '들떠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적으니까. 그러나 이런 허망의 평가와 진짜 평가와의 차이는 현실과 지향사이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그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판가름될 것이다.

3) 대회에서 나타난 인권과 정치의 관계에 관한 교훈

인권과 정치권력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보면, 이번 빈회의를 통해서 정부간회의가 여실히 보여주었고 또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해온, 현재의 국가체제가 갖는 필연적인 한계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다. 일부 인권학자들은 현재의 국가(nation-state)가 세부적인 인권문제를 다루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탈냉전의 갈등(예:보스니아 사태)을 다루기에는 너무 왜소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또, 근대를 거쳐 냉전시기에 완고한 형태로 정립된 대다수 국민국가가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데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고 최근 서유럽의 외국인배타주의의 확산과 세계 곳곳의 민족갈등은 그 징표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정부대표들의 무능력과 준비부족은 현재의 세계체제에서는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보인다. 동시에 빈회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자랑거리 즉 정치적 협상이 난무하

면서 동시에 남측(주로 제3세계) 민간단체들의 철학적 실천적 우위가 증명되었다는 관찰도 가능하다.

즉, 이번 정부간 회의를 국제정치적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렇다. 이번 회의의 주도권은 국제인권분야가 원래 그렇듯이 처음부터 서방선진국들이 쥐고 있었다. 그러나 북미와 서유럽의 국가들에게도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되는 약점이 몇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 나라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외국인배타주의에 관한 문제였다. 또 인종차별의 문제는 단순히 흑인이나 아시아인에게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이른바 선주민문제 즉 백인들이 과거에 정복해버린 사람들의 권리를 새삼 인정해주는 문제까지 확대되는 문제였다. 캐나다와 미국 등이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태평양군도의 선주민문제를 거론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끈 서방국가들은 이런 곤란한 지경을 피하기 위해 인권중에서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최소한으로 언급하고 3세계의 약점인 시민, 정치적 권리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유엔에서 사회주의국가들과 싸울 때도 그랬다). 여기에 주로 자유주의철학에 의해 주도되는 서방의 인권단체들과 서방에서 주도했던 언론이 적극 지지를 표명하여 결국 이들은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무기를 들어 회의 초반부터 아시아 일부국가들에게 악역을 맡기는데 성공했다.

국제회의에서는 서방의 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면 말고도 서방이 주도하는 모습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번 빈회의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시아 각국 정부대표들은 상당수 독재 정치의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도 토론문화에 익숙치 않아서인지 방어적인 발언이나 번거로운 발언을 제외하면 토론의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보인 나라가 드물었다. 그러나, 언어기술적인 측면외에도, 서방의 공격을 받은 일부 비서방국가(중국 등)의 대응전략에도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보면 민간단체들의 초기 대응에도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모두 인권운동전략의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첫째 이들은 서방의 인권보편성 공격을 단순히 외국의 주권침해 혹은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는 방어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대다수 민간단체들의 비난을 사 민간단체들의 갈길이 천서방으로 향하게끔 하여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린 격이었다. 물론 노골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나라들이 아시아에 몰려있기는 하지만,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을 취하면서 동시에 인권의 보편성과 각국상황의 특수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역시 외교적인 미숙함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둘째로, 서방의 공격을 받아치는 방법으로 개발의 권리와 보스니아문제 등의 이슈를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현실적 한계를 갖는 소극적인 자세였다. 대부분 서방선진국에 경제를 이용하는 나라의 대표가 개발의 권리를 적극 주장한다고 해서 곧 이들을 사람 별로 없다. 보스니아 특별결의문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주도의 인권정치를 부분적으로 무력화시켰지만, 하나의 결의문을 얻어낸 반면 빈선언문의 기초작업을 마비시키면서 이번 대회의 성과를 반감시켰다. 결국 개발문제도 보스니아문제도 서방의 입장에서는 대충 잘 넘어간 것이 되었다. 셋째로, 국가중심주의를 숭상하는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평소에 시민사회 즉 민간단체들과 어울린 적이 별로 없어서, 빈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서 민간단체

들과 협력하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또 그 때문에 스스로의 입지를 대폭 좁혔다. 이는 서방국가들과 서방 민간단체들 사이의 공조체계(자유주의적 협조), 그리고 중남미 좌파 민간단체들과 쿠바정부의 협조관계(진보적 협조)와 완전히 대비되는 것이었다. 특히 민족자결권과 개발의 권리, 유엔의 민주화, 열강 간섭의 비판, 인종차별 등의 주제에 관해서는 민간단체들의 협조를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많았으나 그럴 만한 정부가 없었다

나. 세계인권대회 공대위 활동에 대한 평가

- 먼저 공대위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주변조건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각 인권단체들이 처한 현실이 매우 어렵고 분산적이었다는 점
 - 국제연대상의 이런 공동활동이 한국인권운동상 첫번째 사건이라는 점
 -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았다는 점
 - 경험있는 단체나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
 - 공대위 활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보다 참여과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다는 점

<공대위 활동의 의의 >

- 조직적 공동활동의 성과

공대위와 같은 활동은 한국 인권운동상에서 뿐만 아니라 비교적 국제연대활동을 앞서서 해왔던 노조운동이나 여성운동 교회운동 평화운동에서도 발전될 수 없는 소중한 공동활동이었고 모든 성과는 몇몇의 능력이 아니라 공대위의 조직적 공동활동에 달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범은 앞으로의 국제연대활동에도 중요한 귀감을 남겼고 모든 연대활동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상당한 규모의 예산과 국제행사에 대해 좀처럼 이루어내기 힘든 내부합의를 거쳐 이 같은 국내 국외 공동활동을 해낸 인권단체들과 담당자들은 참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낸 것이다.

- 해외동포운동과의 실천적 연대 경험

국제활동에는 해외동포운동과의 결합이 필연적이지만, 지금까지 해외동포운동은 우리 운동에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 의의가 잘 정리되지도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국제활동을 했던 사람이나 단체의 경우 해외동포운동의 '지원'만을 받았거나 생각했을 정도이다. 이것은 정권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인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국제연대활동 혹은 폭넓은 연대에 대한 협소한 이해 또는 국내중심적인 사고가 존재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공대위활동은 여러가지 부족한 면이 많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해외동포운동과 규모있게 그리고 공개적이고도 조직적으로 결합해 활동한 사례를 남겼다. 또 해외동포운동중에서도 운동성과 조직성이 높은 단체 및 헌신적인 개인들과 결합했기 때문에 서로 배우는 바가 컸다. 국제활동에서 해외동포운동과의 당당한 연대는 앞으로 더 넓은 민족범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은 우리문제를 국제화하고 국제문제를 국내화하는데 좋은 초석이 될 것이다.

- 비중있는 국제연대활동

공대위의 조직적 공동활동으로 인해, 공대위는 빈에서 다른 민간단체들로부터 상당한 주목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공대위의 미흡한 경험에 비춰어 이같은 결과는 공대위가 남한의 대부분 인권운동을 명실공히 대표한다는 점과 그 일원들의 올바른 관점 운동적 자세 그리고 성실한 활동에서 나온 것이다. 아태지역 민간단체들의 향후 협의구조를 협의할 때 한국과 필리핀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인권단체협의체가 동시에 거론되어 역할이 부여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런 점에서도 전문가 중심의 구미지역 인권단체들과 우리와 같이 반정부투쟁속에서 성장한 현장인권단체들은 성격과 활동상의 질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공대위가 인정받았던 근거는 사실상 한국의 민족민주운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권운동의 공동활동도 민민운의 한 분야를 대표한다는 관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계획성

이번 공대위의 활동은 집행위에서 검토되고 계획된 내용을 대부분 실행했다- 각 회의 참여, 한국인권상황 홍보, 국보법행사, 전시대설치; 사진전시, 노래; 문화행사, 풍물; 만장 행진, 입장 반영 등. 그만큼 계획이 현실적이었다는 평가도 된다. 즉 용두사미의 계획·실행 관례는 피했다.

< 한계와 잘못된 점 >

대부분의 활동이 뒤돌아보면 준비부족으로 보일 때가 많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 어쩔 수 없었던 여건이 있었으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꼭 인식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 인권운동 전략의 부재

이번 빈회의는 여러가지 쟁점을 미리부터 예정하고 있었는데, 인권의 보편성과 국가주권, 유엔의 민주화, 남북간 빈부격차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기존주권과 선주민의 권리, 유엔의 군사활동과 인권, 사회주의국가에서의 인권, 인권관무관제, 국제인권재판소등이 그렇다. 이런 주제들은 유엔과 유엔활동에 대한 일정한 판단, 국제인권법 분야에 대한 이해,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 등과 아울러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져야 전략도 세울 수 있고 또 접근도 할 수 있는 문제였다. 공대위는 이에 대한 공동의 관점이나 전략은 거의 없는 상태로 빈회의에 임했다. 6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그 이전에 우리 인권운동이 대부분 사건대응적이었던 점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권운동 자체에 대한 전문화와 예비학습이 부족해서 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대위는 현지에서 전반적인 '보고 배우기'에 치중할 수 밖에 없었고 몇가지의 획기적인 활동(본회의시 발언 3, 국보법 행사-선언문, 중국에 대한 비정부단체들의 태도, 비엔나이후 대책회의 참석, 일부 로비활동 등)에서도 진보적인 관점, 운동적인 관점이 부족하거나 서로 일관되지 않은 점이 생겼다. 또 제기되는 여러문제에 대해 그때 그때 입장을 표명하기도 힘들었다. 특히 유엔의 회의에서 유엔에 대한 입장표명의 기회

를 놓쳤다(유엔은 우리에게 50-53년 전쟁의 참전기구이기도 하다).

- 빈회의에 관한 전술의 부재

빈회의는 규모와 종류가 방대한 회의였다. 공대위는 회의 초반부터 되도록 많은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예: 문서기초위, 로비위, 언론위, 등에 대한 인원배치) 반면 언어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통역 및 수행에 배치되는 등 낭비도 있었다. 한청에 대한 공대위의 주문과 한청 스스로 설정한 임무 사이에도 부조화가 있었다. 이것은 실제로 역할배치상의 혼란이다. 그 이유는 중심과제와 부차적 과제를 분명히 합의하지 않은 채 큰규모의 행사에 임했던 때문이다. 우리와 비교하면, 한청은 본회의 포기, 장기수 및 국보법 부각, 기타 공대위 실무지원으로 목표를 분명히 잡았다 - 물론 이것도 상당히 늦게 공지되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과 해외동포들의 역량을 합해 최소한의 집중점을 찾아내 활동을 모아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예를 들면 2개의 전시진열대 단일화, NGO FAIR 참여포기

- 국제회의에 대한 과도한 긴장감

긴장감이 철저한 준비를 촉진하기는 하지만, 공대위의 경우 빈회의의 수준이나 참가단체의 역할과 전문적 활동에 대해 너무 높은 긴장을 하였기 때문에 준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현지의 활동을 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것인 우리가 준비해 갈려고 했던 비디오의 수준, 노래 가창능력, 사진등 전시물의 내용, 입장문서내용 등이다. 오히려 이런 활동은 3세계 현장인권단체의 감각 그대로, 우리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해 진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 노래도 더욱 쉽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비디오역시 자신감을 갖고 설비를 갖춰 기존의 비디오를 매일 상영해도 되었다. 간단한 공연역시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NGO FAIR시의 즉흥적 풍물공연이 가능했다). 행진곡풍의 노래에 대한 우려도 실제와 달랐다. 우리의 전투적 시위와 인권운동과의 연관성도 3세계단체들에게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얻은 교훈은, 국제회의의 분위기나 기준은 투쟁하는 현장단체에게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라는 점이다. 역시 국제연대활동의 주체적 관점이 문제로 된 것이다.

- 연대활동상의 주체적 관점과 태도

연대활동에서의 주체적 자세(즉 현장중심적 태도)의 문제는 국보법행사와 한청 및 해외인사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국보법 행사에서의 베이커씨의 사회, 스톱씨의 공식 공대위 참가 등은 잘못이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 전시대활동(연대가 중심의의로 설정되었다), 단체별 교류활동 등도 내부공유가 없이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 식으로 진행되면서 공대위에 걸맞은 연대활동은 전개하지 못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활동속에서 연대의 원칙과 '누구와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된 토론 한번 없었고 사실 막연한 '배우자' 이상은 아니었다.

준비과정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대위의 각 단체와 활동가들이 서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부족한것이 그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날선 국

제행사라는 이미지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임했고 각 단체의 참가자들이 공대위라는 조직에서 최소한 공유해야하는 현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인권문제,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을 교류하지 못한채로 대외적인 "대표"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대표"하는 활동속에서 대표단의 내부공유가 갖는 중요성을 시사한다.

- 국보법 행사

국보법행사는 사회자 선정의 문제외에 몇가지 더 평가해 볼 만한 점이 있다. 국보법 행사는 꼭 학술행사의 성격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었나? - 이는 발표자 선정 및 발표내용(대부분 법제도와 인권침해의 관계를 다루었다.) 및 결의문의 내용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보통 우리가 국가보안법 문제를 다룰 때 하나의 법 이전에 정권, 통일, 사회운동의 연관성속에서 생각하는데 이번 행사는 소위 국보법의 '정치적 배경'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법중심의 사고가 아닌가하는 반성이 든다. 그러한 악법이 생기는 정치상황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입장 및 처방을 결의문에 담아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더욱 우리 실천방식에 맞지 않았을까?

이 문제의식은 또한 국제인권법에 대한 공대위가 가졌던 막연한 태도와도 연관이 있다. 이른바 '지배계급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부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막연한 입장으로 인권활동을 전개한다면 국제인권규약, 국제기구, 국제인권활동, 인권투쟁과 법의식 전반에 막연함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러한 막연한 태도는 법률전문가와 (변혁지향) 인권운동단체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공대위의 장점을 배경으로 1세계의 전문가중심 NGO나 대중기반 없는 NGO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들이 갖는 전문성을 배워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했다.) 모든 활동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다시금 주목받아야 할 듯하다.

- 해외동포운동과의 올바른 연대활동

공대위는 처음부터 재유럽 교포운동내부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박희원씨나 광은경씨에게 개인자격으로 이번 공대위활동과 결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Coordinator(조정자) 역할을 기대하고 그렇게 전제하고 현지에 임했다. 그러나, 실제 활동상의 지원과 결합은 한청중심으로 협소화되었다. 한청의 뛰어난 역량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공대위도 여러수준의 단체와 개인이 결합한 것인데 반해 해외동포운동쪽에 꼭 높은 수준의 운동단체만을 기대한 것이라면 이것은 연대의 관점이라기 보다는 '도움을 얻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외동포측도 다양한 수준의 단체와 개인이 수평적으로 결합한 체계로 임하는 것이 옳바르며 그럴때 조정자는 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했어야 할 것이다. 현지에서 단체와 개인이 섞여 참여한 해외동포들과 공대위사이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이 조정자의 역할이 잘못 의미전달되었거나 아니면 느슨한 협의과정 때문에 한청을 제외한 타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와 결합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직과 혹은 조직외의 개인을 대하는 데의 원칙으로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와 이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개인이라는 이유로 애매모호하게 일을 맡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외단체의 연락과 협력요청과정에서는 그 단체에 대한 성격 파악과 위치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도 그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해외참여자들이 그냥 도와주러 온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현장 대응방식의 혼란 및 공대위 운영상의 문제

○ 체계 : 여러 부족함을 갖고 국제회의에 간 공대위에게 남겨진 것은 현장에서의 유연한 대응이었는데 이것도 잘 되지 않았다. 그 현상을 보면, 첫째로 해외동포단체들과 회의참여목표, 중점과제, 역할분담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공유되지 않았다. 그 연결통로는 집행위원장 혹은 공대위 총무 혹은 대외협력담당이었겠으나 모두 제대로 하지 못했다. 둘째로 매일매일의 협의를 충실히 하기에는 숙박여건이 너무 나빴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악조건으로 작용했다. 셋째로 빈 현지에서의 대외활동과 내부공유활동이 분명히 나뉘어지지 않아 특히 대외적 활동과 회의 본흐름에 대한 충분한 내부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내부공유의 가능성과 현실성 : 실제로 국제연대활동상 필요한 언어능력 및 기타 경험을 기준으로 볼 때, 공대위가 빈 회의 전반에 관해서 충분한 내부공유를 하면서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특히 공대위의 규모에 비해서 1)빈회의 성격을 이해하면서 2)언어와 경험을 겸비한 사람의 수가 극히 적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대위의 조직적 성격과 활동상의 유연함을 동시에 취하기 위해서는 특수(전문)활동팀과 일반활동팀이 나뉘어 있어야 했다. 경험과 언어능력을 갖춘 소수의 특수활동팀은 (라비나이르, 세실 지메네스, 폴 림과 같이) 일과 전체를 특수 전문분야활동을 하는데 여력을 쏟는데 배치하여 회의 본류에 최대한 합류해 그만큼의 성과를 내도록 하고, 일반활동팀은 전시, 홍보, 단체별 만남 등 인권상황홍보에 주력케 했다. 이번 빈회의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런 실천적 예는 필리핀 인권운동측이 세실 지메네스와 맺은 관계에서 엿볼 수 있다. 즉 조직성은 활동을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미덕은 아닌 것이다(투쟁과제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듯이). 이번 경우 이영숙, 이진숙, 곽은경, 전순옥, 장소영씨 등이 보다 자유롭게(소속단체의 귀속감이나 통역의 의무를 벗어나) 광범위한 활동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손실이었다고 보인다.

○ 연대의 방향과 원칙 : 6월 16일 필리핀 운동권이 보여준 자세는 본 받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현 민간단체 논의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예: 대중기반 없는 단체들과 개인(전문가)들이 아태지역 민간단체 논의를 주도하는 것을 운동적으로 잘못)를 여러가지 정보선을 통해서 잘 파악한 후, 사전에 파악하여 뜻이 맞을 것이라고 판단한 한국측과 네팔측과 사전 조정대화를 갖고(물론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국제연대활동의 신뢰관계가 작용했다), 신속히 논의를 전개해 아예 목표로 새로운 조직체계안을 전체회의시 제출했다. 물론 신속한 통과가 당연한 귀결. 이들의 조직적 사고는 정확했다. 이에 비해 빈에서 보여준 이뤄 인권운동가들은 우리의 뿌리였던 변혁운동적 관점을 많이 잊은 듯 했다. 이 사례에서도 인권운동에 전문가중심과 변혁적 대중운동중심 사이에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엿보인다(이

긴장관계는 전문가가 현장성 변혁성을 갖추고, 운동가가 전문성을 갖추는 양방향 변화로 해소된다). 국제연대의 방향과 원칙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변혁운동은 상대방 단체의 운동적 성격과 대중기반을 우선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반에 근거에 주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운동성과 주체적 자세).

○ 생활상의 자세 : 일과시간과 생활실무분담은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서로를 복돋우는 자세도 매우 약했다. 대체로 느슨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아직, 해외에서의 생활이 느슨해지기 쉬운 문화라는 점에서 규율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다. 과제

모든 평가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과거를 회고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고로, 당장 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동으로 실천했던 활동의 의미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공대위의 평가는 앞으로 공동으로 할 일을 중심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단체의 평가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인권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진행되었고 또 그러한 과제에 맞춰 평가내용을 집중하였다.

- (1) 인권운동의 전략과 종합적 인식의 형성
- (2) 인권분야 국제활동의 공조체계 창출
- (3) 위 두 주제에 대한 전문인권운동가의 양성과 정보자료의 체계화

이러한 평가에 기초하여 천주교인권위는 <1>과 같은 취지로 <2>를 제안한다.

<1> 취지

- ① 인권운동단체들의 상설적 공조체계가 꼭 필요하며
- ② 그 공조체계는 대표자회의 등 형식적 요건보다도 실제 인권운동의 연대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공동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결합이어야 하며, 즉 공동활동을 실제 이루어내는 실천적 공조체계이어야 하며,
- ③ 이 공조체계는 별도의 기구형식보다는 단체들의 결합형식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 ④ 이 공조체계가 잘 가동되기 위해서는 공조활동을 위한 중심(센타)이 꼭 있어야 하며,
- ⑤ 현재의 여건상 그 중심기구(센타)는 별도로 꾸리기 보다는 기존의 한 단체가 자임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2> 조직

- ① 인권운동단체들의 정기적인 공동활동 협의체계 상설화(회의체)
- ② 공조체를 추동하는 중심(센타)역할을 한 단체에 부여(혹은 자임)
- ③ 공조체 중심단체의 역할

- 인권분야 자료집중/체계화
- 인권운동 전략, 종합적 인식의 형성과정 추동
- 공동 국제연대활동의 실무담당
- 전문인권운동가 양성과정 추동

***몇가지 할일 제안**

- 첫 모임에서 93 하반기 공동집중 활동 설정
-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동의 교양/교육/양성과정 실시
(기존의 교양과정을 확대발전하면서, 해외인권훈련코스 파견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문역량 양성 추진)
- 공동 정보자료실 설치 운영 (색인전산화를 목표로)
- 공대위 공동평가서 국내외 회람
- 아태지역 인권단체 협의체(NLC 및 그 후속) 전망 나오기
- 비엔나선언문에 대한 공동평가서 작성, 국내외 회람
- 「탈냉전시기 인권운동과 국제연대」 워킹 개최

2.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평가서

가.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확인한 것

1) 세계인권운동의 방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각 나라의 정부는 자국의 정치적인 이해를 관철시키는 한 수단으로 인권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이로 인한 유엔 내에서의 일치된 정책과 행동을 수립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 세계인권운동이 인권의 보편성을 무기로 제3세계와 사회주의권을 압박한다. 인권이 제국주의의 분할지배통치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내인권운동이 막연하게 인권문제를 대하던 것, 따라서 본회의등에서 거론될 인권의 보편성등의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지 못한 점들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로부터 국내의 인권운동은 국제적인 인권운동을 전개하기위해서는 전략전술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2) 세계 인권운동의 다양한 조류와 견해를 접할 수 있었다

인권이 막연한 문제가 아닌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이런 인권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많은 견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인권문제는 매우 정치적이며 진보적 대중운동과 결합할 때에만 인권운동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와 문제의 제기

인권문제에 대한 연구와 학습 프로그램조차 없는 국내적 현실에 비춰볼 때 인권문제에 대한 심도있고 구체적인 분석, 문제제기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비교적 높으나, 국내 인권운동의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직껏 제3세계에서는 실종을 비롯한 각종의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매우 낮고 권력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는 현실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비교적 높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보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각론적인 인권운동에서부터 연합적인 인권운동체까지 활동하는 타 민족 형제들의 인권운동에 비해서 우리의 인권운동의 역사는 길어도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인권운동은 아직 멀었음을 확인하였다.

5) 국제인권운동에의 역할과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간 국내의 인권운동은 해외인권단체와 교류도 제대로 갖지 못하였으며, 국제연대는 꿈도 꾸지 못하였지만,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정통적인 운동성을 지닌 국내 인권운동의 국제적인 연대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또 체계만 갖추면 국제인권운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운동이 갖고 있는 대중성에 기반한 인권운동과 치열한 역사적 경험의 축적은 타 국가의 민간단체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제인권운동도 제3세계의 민중투쟁과 결합한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야만 올바르며, 서방과 친서방의 단체들의 간섭과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6) 해외 동포 조직과의 연대는 국제연대활동의 질을 높이는 매우 유효한 길임을 확인하였다

해외 동포 조직들의 풍부한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조국애에 기초한 헌신성은 타민족 국가들의 인권운동이 갖지 못한 자양분이며(실사 다른 민족의 동포들이 월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동포 조직들과의 연대는 국제연대 활동을 열고 그 질을 높이는 매우 양호한 토양임을 확인하였다.

나. 세계인권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1) KONUCH의 국내 활동은 주로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통한 업무 처리에 중심이 주어졌다. 이는 국내 인권단체들이 인권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였고, 특히나 국제연대의 경험이 전무한 처지에서 보면 집행위의 회의를 통한 업무조정보다는 국제 인권운동의 조류와 현황, 문제점등을 함께 공유하는 노력에 더욱 많은 투자를 했어야 했다. 집행위는 회의 소집도 힘든 상황과 집행위원들의 무책임성으로 소수의 집행위원에게 과중한 하중이 실리는 면도 문제였다.

2) 또한, 인권대회를 계기로 하여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한 제기과 아울러 인권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당초의 목적은 올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대회를 매개로 하여 국내의 인권문제, 특히나 김영삼 정권의 등장이후 개선되지 않는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밝히는 20의 노력은 너무 쉽게 간과되었다. 실제 인권대회에 참가를 준비하는 것만도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도 우리 주체적 역량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 정보의 공유 문제에서도 세계인권대회가 준비되는 과정을 나름대로 먼저 안리고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함께 나누려는 의지가 부족하였고, 또한 그렇지 못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였던 측면이 있었다. 이로부터 참가 대표단의 많은 참가자들은 감을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로 참가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강했다. 이로부터 세계인권대회에 대한 KONUCH 차원의 전략과 전술의 수립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4) 준비과정에서부터 우리 운동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획득한 자산에 대한 믿음, 즉, 주체성의 결여가 보였다. 지나치게 막연한 국제적인 수준을 감안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 비디오나 노래선곡등 - 에 대해 과소평가하였다. 정보의 부족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는 주체적인 자세의 결여에서 나온 것이었다.

5) 해외동포 단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그들에 대한 배려와 협력의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다. 비엔나 현지활동 평가

1) 비엔나에서의 현지 활동을 평가할 때 먼저 지적되어야 하는 KONUCH 대표단의 활동 체계에 대한 문제부터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단의 활동 체계는 위의 상징적인 대표단과 집행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구분되었는데,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해외동포 단체들에 배려와 결합방식의 잘못으로 실제 더 많은 역할을 했어야 할 사람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했고, 이는 현지활동을 하면서 해외동포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2) 비엔나에서도 매일처럼 비생산적인 회의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였다. 회의도 보고 차원의 것이 대다수였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일정과 역할의 조정 차원에서 머무른 것이었다. 그 시간에 회의의 경과와 일정에 따라 나오는 문건이나 정보를 함께 학습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보다 나은 활동을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정부간 회의와 민간단체간의 연대는 여러 조건과 우리의 역량을 비교할 때 비교적 성실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각 단체의 연관단체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아쉬웠다.

4) 생활태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나태하였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자기 것만을 찾고 자신의 일 외의 것에는 무관심한 태도등도 보여 특히나 해외동포들에게 실망을 준 부분은 반성해야 할 점이다. 국내 대표단간의 또는 해외동포들과의 동지적 유대를 강화할 좋은 기회를 상시하였다.

5)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의 결여로 말미암아 전체 상황에 끌려가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는 우리만의 회의나 활동에도 많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라. 세계인권대회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 인권단체간의 연대를 위한 제언

1) 우리의 인권운동은 그동안 치열한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의 주요한 자산을 간직하고 있다. 즉, 이는 민중성과 변혁운동과의 튼튼한 결합 속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은 곧 반독재민주화투쟁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반면, 전문성의 부족, 인권활동가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87년 이후 급속히 약화된 대중기반의 문제도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인권운동의 전략전술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 있는 역량도 효율적으로 결합시켜낼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2) KONUVH의 활동은 이런 국내인권운동단체가느이 결합도를 제고시켰고, 연대의 필요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협소한 정치적 인권문제에만 한정되었던 이누거운동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초보적이지만 공동의 국제연대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3) 국내 인권운동의 발전방향은 인권운동가의 양성과 인권운동 조직의 개편과 형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먼저 인권운동에 대해 헌신할 운동가의 양성없이 어떤 생산적인 논의도 허구적이다.

4) 현재의 KONUCH의 틀을 유지하는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나, 이를 추동하고 이후 조직적 전망을 끌어갈 구심의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협의체의 구심은 어느 단체나 또는 개인이어도 무방하나 그간 인권운동의 과정과 이후 인권운동의 전망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헌신할 수 있는 인물로 되어야 하며, 협의체는 일단 93년 하반기에 공동의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내면서 그 사업들의 성과에 기초한 재평가 위에 연대기구의 발전을 새로이 모색해야 하난.

5) 협의체는 이후 연합체로의 자기 발전의 전망을 가져야 하며, 전국연합의 각 부문, 지역조직의 인권위와 안권담당자를 추동해낼 수 있었야 한다. 이로부터 협의체는 지금과 같은 비대증적인 단체나 아닌 대중적인 기반을 갖는 운동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협의체의 인정 하에 독자적인 인권센타르 운영하여 여기에 각 인권단체의 정보와 자료를 모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인권단체 성원들부터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국제연락기구를 협의체 또는 센타에 위치시켜 국제관계를 집중시키고 국제담당 인자를 육성해야 한다.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평가서

가. 객관적 조건과 주체 역량

5개월 정도 계속된 공대위의 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주체적 역량과 우리가 직면한 객관적 조건 등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과연 우리가 우리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했는가, 만일 그러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먼저 객관적 조건을 보면, 국내에서는 대통령 선거의 패배와 새 정부의 출범, 중산층과 언론의 극심한 보수화 경향, 민주화운동 일반에 대한 대중의 지지의 감소 등의 상황 아래에서 인권문제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부대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문제의 성질상 누구든지 스스로 인권을 탄압한다거나 인권에 무관심하노라고 공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 관계 규약과 기구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고 민간단체들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지만 현재의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고 인권문제는 말의 잔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권운동은 우리 민주화운동 내부에서조차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주변부에 위치하여 민주화운동역량을 제대로 배치받지 못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의 주체 역량, 더욱이 국제분야에 관한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개별 단체 별로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조직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에 관한 이론, 재정, 홍보수단, 전문성 등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국제분야에 관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이번 인권대회가 대부분의 단체에게 본격적인 첫 국제회의 참가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공대위 조직의 성과와 한계

우리 공대위는 그동안 인권 관련 부문에서 일하면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여러 단체들이 한 조직으로 모여 공동의 활동을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늘리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지대하다. 방북 및 비인 대회에서 우리가 가진 조직적 견고성은 상당히 돋보였고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가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우리는 하나의 조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만일 각각 독립적으로 참가했다면 엄두도 못냈을 활약을 할 수 있었다.

한편 공대위가 급조되고 그 결합이 견고하지 못한 조직으로서 지닌 한계도 뚜렷이 드러났다. 공대위는 그 목적, 활동 방식 등에 관해 구성단체들 모두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리하여 공대위는 많은 관계자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한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고 따라서 그 역량도 한정되는 수가 많았다. 또한 그 주력인물들의 장·단점이 조직적으로 극대화 또는 극복되지 못하고 조직의 활동에 그대로 반영되고 말았다. 그 장점으로서의 집요함을 들 수 있고 단점으로서의 안이함을 들 수 있다.

다. 공대위의 대회 참가 목적

공대위는, (1) 국제인권운동에 기여하고, (2) 국내인권상황을 외국에 선전하고 그것에 대한 국제적 여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것을 개선시키고, (3) 인권운동 관계자들의 국제적 경험을 쌓고 국제적 연대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회에 참가키로 했다. 이 목적 자체가 그것 되었다고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목적은 어쩌면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이고 당초 대다수 공대위 관계자들은 오랫동안 인권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막연한 호기심에서 참가를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이 점은 국제 무대 경험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 태도, 즉 “우리가 대회에 가 보았자 무엇을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는가? 이미 판은 짜졌을 것이고 우리는 그저 구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와 어울려 대회 참가 준비와 참가과정에서 목적의식적 적극적 전향적 사고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라. 대회 참가 준비 과정

우리는 대회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 홍보자료의 준비 등에 있어 미흡하지만 현실 역량에 비추어 볼 때 높이 평가할 만한 활동을 하였다. “Human Rights in Korea”의 작성, 소식지의 발간, 국가보안법 심포지엄의 준비, 대회 참가자 내부 토론회 등은 그 내용상의 수준과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인권운동이 지향해야 할 사업 방식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그 반면에 준비 과정에서도 몇가지 부족함이 있었다. 첫째, 각 단체별 활동을 그 단체에 맡긴 채,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해외동포들과 벌이게 될 공동활동에 대한 준비가 없어서 “가서 보자”는 식이었고, 셋째, 국내 행사가 형식에 그친 감이 있다. 집행위원회가 거의 제시각에 열리지 못한 것, 집행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결정되고 맡겨진 사업이 책임 있게 수행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등도 아쉬운 점이다.

마. 대회 참가 활동

대회에서 행한 공대위의 활동은 우리의 부족한 역량에 비추어 볼 때에 눈부신 것이었다. 한국 상황의 국제적 홍보, 국가보안법 행사, 문화행사, 해외동포들 및 국외단체들과 연대 확보 등의 면에서 우리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 해외 정보의 수집도 상당하였고 그 공유는 차후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회 본 회의의 흐름에 대한 파악, 정부 대표들에 대한 로비, 국내언론 및 대중에 대한 홍보 등의 면에서는 취약함을 드러냈고 이 부부닝 우리의 주요한계이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역량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하겠으나 해외동포(일시적 거주자 포함)들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은 지적되어야 한다.

공대위는 출발 전 국내에서 참가자 별 역할을 분담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함 등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아-태 지역 초청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집행위원장의 일부가 과중함에도 대회 중반까지 실제적 해결을 꾀하지 않은 점도 동포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열하여 해외동포들의 부담과 불만을 일으킨 점은 철저히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바. 공대위 활동의 교훈

공대위 활동은 우리 역량의 취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우리의 국제 경험, 우리 내부의 결속, 해외동포 및 단체들과 맺은 우의와 연대 등의 면에서 흔히 얻을 수 없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 자신이 국제무대에서 배울 점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준에서도 국제운동에 기여할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일이다. 우리는 예측했던 바와 같이 이론과 정보의 부족 등을 절감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에 가르쳐 줄 수 있는 운동경험, 조직적 결속력 및 헌신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요컨대 우리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녔으나 아직 구체적 역량은 부족한 미완의 대기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잠재력을 현재화시키기 위하여는 우리의 운동이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 비조직적, 비현실적, 무규율적 사업작풍을 극복하고 항상 현실을 직시하여 전략, 전술적 사고를 게을리하지 않는 조직적 태도를 생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 공대위의 조직적 전망

기본적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운동 현실에서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요체이다. 인권운동은 실천운동의 중심으로서 민주화 운동 내의 위상을 정립해야하고, 인적, 물적 역량을 확충하고 전문성 특히 이론을 개발하며, 항상 전략적 관점에서 이중적 사업방식에 따라 기동력과 과학성을 갖추고 연대활동을 하는 견고한 조직을 구축하고, 국제적인 장을 활용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홍보 수단을 확보하여 대중성을 획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조직화와 연대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인권운동 단체 협의회”와 같은 느슨한 협의체를 결성하여 상호 사업을 협의 조정하되 자료실을 부설해 자료를 집중? 공유하고 연 1-2회 대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대위가 이 조직의 모태가 되어야 한다.

국제인권운동은 보편적 인권 개념에 비추어 그자체가 우리의 책무에 속하는 분야일 뿐더러 이론, 자세, 경험, 선전 등의 면에서 국내운동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의 현역량에 비추어 국제인권운동에는 “인권운동 단체협의회”를 창구로 하여 조직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면서 이들 인권유린의 책임자 처벌 문제가 매우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Impunity의 문제)

그리고 더욱 놀란 것은 우리 운동이 힘들다고는 해도 우리는 매우 양호한 조건과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그것은 우리 국민대중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가히 제3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편이라고 하는 점과 반면에 인권운동의 수준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의 수준조차 인되는 나라도 많지만, 인권운동의 치열함과 장구한 역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인권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에서부터 인간해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포괄하는 폭이 광대함에 한번 더 놀랐고, 폭이 광대한 것과 함께 각 시안들을 분석하는 틀은 매우 치밀하다는 점이였다. 한 인간이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을 분석할 때 정치적인 배경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심리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문제, 사회적인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위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그 전문성에 다시 한번 놀랐다.

하지만 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다. 나라 안에서 그것도 우리들 안에서 우물 안 개구리 하듯 보듯이 세상을 알아왔던 내게는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든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던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그것이 되레 중압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 경험을 소박하게나마 정리하는 일은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다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기에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소개한다.

2

내가 출국하던 당시는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으로 한총련과 또 한 명의 학생을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공권력의 억지스러움이 진행되던 때였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기택 민주당 대표와 만나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의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혔고, 현대정공에서는 조합장이 단체협약

안에 직권조인하는 일이 터질 때였다.

이내와 백일이 갓 넘은 아이, 그리고 백발의 총무님의 전술을 받으며 내내 구름의 바다 위를 나는 비행기를 타고 창장 16시간의 지리한 여행 끝에 비엔나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6월 16일 오후 10시가 넘어서였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달리다 암스테르담에서 남동쪽으로 다시 두 시간을 구름의 바다 위를 헤엄쳐서 날아갔다. 비엔나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무척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항까지 항공사가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포의 차를 타고 마중을 나와줘 아찌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내가 갖고 있던 정보만을 갖고는 난 비엔나에서 미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비엔나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항우 안에 초봄에서부터 초겨울까지 다 있다'더니 비 내리는 비엔나는 찬바람과 함께 동양에서 온 손님들 처칠게 대해주었다.

우리의 숙소는 '더뉴브에서 가깝다'는 뜻의 한 야의 캠핑장이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KONUCH 대표단들과 외국서 온 대표단이 결합했는데, 낯모르는 사람들은 해의 동포들이었다. 그곳에 가니 내일의 활동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불빛 밑에 드러나는 낯익은 얼굴들과 새롭게 인면을 익히고 지낼 그들이 환영해 주었다. 내일은 KONUCH가 주최하는 국가보안법 심포지움이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행사에 대한 마무리 점검이었다. 행사 후에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풍물시위를 하기로 하고 그날의 회의는 마쳤다.

회의 후에 몇 사람과 진로 페소주를 마시면서 그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민박을 거부하고 군용마사에서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아침과 저녁은 식사 양반을 써서 지어 먹고 있다는 것. 해외에서 온 동포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일을 함께 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모임을 준비한 JPC가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넘어 민간단체간의 조정과 결정까지 간섭하는 바람에 해체되었다는 얘기와, 카타가 NGO 포럼 마지막 날 연설자로 초청되어서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전역의 민간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점(카타의 집권 당시 남미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실종 권이 발생했고, 한국에서도 광주의 학살이

B. 세계인권대회 참가기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다녀와서

박 래 근

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1

지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는 25년만에 유엔 인권대회가 열렸다. NGO(비정부단체, 이하 민간단체로 함)의 사전 행사인 민간단체 포럼이 열린 6월10일부터 2주 넘게 행사가 있었다. 이 회의와 행사를 위해 180여개국의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와 약 2,000개로 추산하는 민간단체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어서는 인권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지만 냉전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간의 인권분야에서 이뤄진 진보를 검토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인식의 증대에 목적을 두

안에 직권조인하는 일이 터질 때였다.

이내와 백일이 갓 넘은 아이, 그리고 백발의 총무님의 전술을 받으며 내내 구름의 바다 위를 나는 비행기를 타고 창장 16시간의 지리한 여행 끝에 비엔나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으로 6월 16일 오후 10시가 넘어서였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달리다 암스테르담에서 남동쪽으로 다시 두 시간을 구름의 바다 위를 헤엄쳐서 날아갔다. 비엔나 공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를 무척 고민하고 있었는데, 공항까지 항공사가 독일에서 유학하는 동포의 차를 타고 마중을 나와줘 아찌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내가 갖고 있던 정보만을 갖고는 난 비엔나에서 미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비엔나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항우 안에 초봄에서부터 초겨울까지 다 있다'더니 비 내리는 비엔나는 찬바람과 함께 동양에서 온 손님들 처칠게 대해주었다.

우리의 숙소는 '더뉴브에서 가깝다'는 뜻의 한 야의 캠핑장이었다. 서울에서 출발한 KONUCH 대표단들과 외국서 온 대표단이 결합했는데, 낯모르는 사람들은 해의 동포들이었다. 그곳에 가니 내일의 활동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불빛 밑에 드러나는 낯익은 얼굴들과 새롭게 인면을 익히고 지낼 그들이 환영해 주었다. 내일은 KONUCH가 주최하는 국가보안법 심포지움이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행사에 대한 마무리 점검이었다. 행사 후에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풍물시위를 하기로 하고 그날의 회의는 마쳤다.

회의 후에 몇 사람과 진로 페소주를 마시면서 그간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민박을 거부하고 군용마사에서 집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아침과 저녁은 식사 양반을 써서 지어 먹고 있다는 것. 해외에서 온 동포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헌신적인 열정으로 일을 함께 함으로써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모임을 준비한 JPC가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넘어 민간단체간의 조정과 결정까지 간섭하는 바람에 해체되었다는 얘기와, 카타가 NGO 포럼 마지막 날 연설자로 초청되어서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전역의 민간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점(카타의 집권 당시 남미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실종 권이 발생했고, 한국에서도 광주의 학살이

고 있었지만, 정부 대표들의 무성의와 준비 부족, 각국의 참예한 이해의 대립, 서방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와 남측 언론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의 세기적인 회의는 애초부터 확실한 결론을 내오기란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 속에서 출발했다.

이 회의를 위해서 국내에서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KONUCH)를 3월 12일 구성하여 방북회의에 참가하는 등의 준비를 착실히 했다.

KONUCH에서는 국내에서 20명이 넘는 수의 각 단체 실무진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출국했다. 해외 한정된 조직과 계속 양심수추진회에서 10명이 넘는 동지들이 유엔인권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비엔나로 달려왔다. 어느 나라의 대표단에 풀리지 않는 인원과 준비를 가지고 KONUCH는 비엔나를 간 것이었다. 한국의 인권운동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는 이 세계적인 행사를 앞두고 사실상 나는 제대로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6월 10일 출국하는 이철규추모사업회의 황창은 간사 편으로 일사의 외문사를 알리는 리플렛과 "NO MORE DEATH!"라고 새긴 검은 색 티셔츠-티셔츠에 진화번호와 팩스번호까지 새 있는 것은 처음 봤다는 동포들의 지적을 기쁘게 접해야 했지만-와 의문사 서명용지만을 달랑 보내 놓고는 비오는 주말을 경회대에서 합동추모제 행사를 치르고 뒷정리까지 하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준비해 갔더라면 하는 후회를 현지에서 수없이 했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버린 때였다. 그곳에서 내가 보고 느낀 첫 번째의 충격은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학살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였다. 군사정권이 몰락하고 민주화가 진행된다는 남미와 아시아의 각국에서 고문, 실종, 학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그 정도도 매우 끔찍하다는 점이였다. 그와 함께 이런 나라 NGO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인권유린을 지행하고도 비판 정권 아래서 처벌되기는 커녕 계속 국가권력의 그늘에서 변함없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 민중을 억압한다는 점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광주학살의 주범들이 문민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 나라에서 비호를 받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분노를 느끼

러기면 NGO들이 처음 물품판매와 홍보대를 설치했던 페어 텐트가 나오지만, 거의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단지 우리와 같이 값이 싼 닭고기로 점심을 때우려는 사람들이 점심 때나 겨우 들리는 곳을 민간단체들의 주요 활동의 장으로 만들려 했으니, 이것만으로도 알조가 아닌가. 가장 먼저 실내로 들어가 홍보대를 설치한 것도 우리 대표단이라고 했고, 실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규책을 가장 먼저 위반한 것도 우리 대표단이라 했다. 특히 우리들 앞에는 한정된 물품 팀들이 앞장서곤 했으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것이다.

6월 17일 우리는 지하에서 가장 넓은 Hall D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안보와 민중의 안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움을 열었다. 하버드 대학 엔칭연구소 부소장인 에드워드 베이커 씨가 사회를 보고 영국 벨파스트 퀸스대학교 법과대학 K.S. Venkateswaram 교수가 아시아의 국가보안법을 개관하는 기조발제, 한국에서 박원순 변호사를 비롯하여 아시아의 다섯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의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주로 지적된 것은 아시아 지역의 정부들이 이데올로기적인 목적과 독재정권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기 위해 비상시제나 적용할 법을 일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결의문에서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의 석방과 유엔에 서의 이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는 만장을 앞세우고 본회의장으로 가서 풍물을 치면서 한편 시위를 벌였다. 친청배 변호사의 연설과 각국 대표들의 연대사로 뜨겁게 진행된 시위를 경찰과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했다. 이 행사는 국가보안법을 주제로 한 첫 국제행사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광범한 국가에서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점,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준비하기로 한 행사가 대부분 준비부족으로 무산된 데 반해 성실히 준비하여 이후 3일동안 34개국의 83개 단체와 5개 국제단체들의 시명을 받을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후 우리 대표단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여 중요한 직책을 계속 맡을 수 있는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행사였다.

자행되었다. 이는 미국의 인권외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카터는 미국에서 국민자 구호활동을 하는 인권운동가가 되어 나타났다고 한다). 카터의 연설시에 아르헨티나의 '오일광장이머니회' 회원들이 '살인마'라고 외치며 가장 격렬하게 항의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리고 티벳의 정치지도자이자 종교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초청이 중국정부의 압력으로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청 스테판 성당이 있는 스테판포라지에서의 시위 등을 들을 수 있었다. 일단 날이 밝으면 회의장부터 둘러보고 분위기가부터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얘기가 다 생소한 것들 뿐이었다.

아전참대에서 군용모포를 덮고 후독후독 빗소리가 들리는 군용막사에서 시차와 관계없이 피곤한 몸은 쉽게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암스테르담까지 오는 중간에 어느 젊은 두 남녀에 의해 유럽으로 팔리간다는 네 명의 아기의 모습, 그 중에서도 유난히 시끄럽게 울던 갓 백일이나 지났을 성 싹은 아기의 모습은 내 딸의 모습과 겹쳐서 대회가 기간 중 늘 버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만난 한 동료 이종아가 "이제는 살 만쯤도 되었으니 고아 수출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낫이 뜨거워 비행기 안에서 내내 혼났다"라는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미 국으로 팔리기는 아기들은 많은 수가 장기를 빼이고 그 나라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는 죽어가고,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 팔리가는 고아는 거의 노예로 키워지는데 성적 노리개 역할까지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력의 확보 수단으로 고아를 입양하는 유럽 놈들도 문제이지만, 고아를 수출하여 돈을 취하는 우리나라의 무수무수 하는 재단이 그렇게도 미울 수가 없었다. 비엔나 인권대회에서 아동의 인권에 대해 많은 양의 항목들을 서술했지만, 그 많은 인권 관련 문서들과 결정들이 거의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고아가 돈벌이의 수단으로 팔려갈런 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대회 기간 내내 김치와 된장찌개를 그리며, 맥주보다 더 비싼 물도 몸에 맞지 않아 화장실의 물을 주로 먹으며 고기와 빵에 질려서 지냈다. 신토불이(身土不二), 조선놈이 살기는 조선 땅이 제일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세계인권대회는 리우 환경회의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 인권을 다룬다는 점에서, 또한 각국의 인권현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정부 대표들을 중심으로 하여 열린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큰 성과를 내오긴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했다. 작년 엠네스티의 보고서에 의하면 여전히 세계 54개국에서 여전히 정치적인 살인으로 인한 의문사와 실종자가 존재하고 있고, 92년만 해도 20개 국가에서 정권의 테러로 인한 1,270명의 실종자가 구속 전후에 생겨났다고 보고되는 마당에, 또한 보스니아 사태를 비롯하여 인종청소와 학살, 난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악한 인권현실에서 열렸던 점으로 보아 이런 인권문제에 책임지는 정부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는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점을 갖고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하여 인권의 보편성 문제, 달라이 라마 초청의 건, 민간단체의 역할과 참여의 범위, 이슬람국가 대 서방국가들의 대립, 인권고등판무관제의 신설 문제 등의 문제를 하나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총 200여 항목의 선언문 초안에 합의하는데 대부분 정부간의 이해조정과 타협으로 무성의하게 검토되었고, 끝내는 문인기초위원회에서 민간단체의 대표들을 배제하는 만행조차 저질렀다. 대회 마지막 날인 6월 25일 밤 11시 55분경에 가까스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냉전 질서가 무너진 새로운 상황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새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는 터무니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민간단체들이 가장 중심적인 사안으로 생각했던 인권고등판무관제도의 신설 문제도 막바지에 차기 총회에 상정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침울하고 말았으니, 정부 대표들이 벌인 본회의는 타협과 무성의로 점철된 매우 실망스런 것이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 처음 진출하는 것이라 감이 전혀 없었으나, 정신대문 제대체현의회와 같은 경우는 본회의의 선언문의 내용을 바꾸도록 외교활동 을 펴서 결국 일본정부에 외교적인 패배를 안겼던 것은 하나의 중요한 경험 일 것이다.

행사장은 오스트리아 센터였다. 장중한 유엔 본부 건물 비슷한 건물 두 동 옆에 붙은 건물의 지상층에서는 정부간 대표들이 본회의를 진행했고, 지하층에서는 각국의 NGO들이 사무실도 차리고, 홍보대며 물품 판매대도 차리고, 회의도 하는 공간이 있었다. 보통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대립적인 개념으로 지상과 지하를 구별해서 말했다. 그만큼 한눈에도 NGO를 대하는 유엔과 오스트리아 정부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었다. 민간단체들을 길들이는 한 수법이라는 한 동포의 지적이 날이 지날수록 옹골게 여겨졌다.

회의 석상에서나 문건에서는 NGO들의 그간의 헌신적인 노력이 인권현실을 많이 변화시켰으며, 그런 기여에 대해 감사한다고까지 정중하게 말했다. 다만, 실상은 인권문제에 관한 한 정부들의 미움을 받는 진보적인 인권단체 들을 고깝게 생각할 리가 없었다.

지하 1층 입구를 들어서면 먼저 출입구에서 몸과 짐의 검색을 받아야 했고, 엠네스티인터내셔널의 홍보대가 눈에 띄었으며, 한 바퀴 도는 원형의 공간들이 각종 회의장이었고, 복도에는 전시대와 홍보대가 있었다. 목걸려 죽거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모습 등 참혹한 세계의 인권상황이 인종만큼 다양하게 전시되고 있었다. KONUCH는 HALL K 앞에 홍보대를 설치하여 광주학살을 비롯하여 인권의 현실을 알리는 사진을 전시하고 그 앞에 자료들을 놓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인권 현실을 알렸다. 외문사 진상규명 서명도 주로 거기서 받았다. 그리고 입구의 정 반대편 쪽 NGO Fair Tent로 내려가는 입구에 물품 판매대를 마련하였고, 바로 그 옆에 장 기수들이 사는 0.7평짜리 독방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는 대표적인 장기수 김선명을 식방하라는 영문 구호가 적힌 걸개그림을 붙여놓 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그곳을 통칭 '감옥' (이 감옥은 미국에서 온 한정된 회원이 공들여 만든 작품이다)이라 불렀고, 외국 사람들은 과연 그런 감옥에서 몇 십년을 사는 게고 되풀이 묻고는 했다. 그 감옥 앞을 지나 밖으로 향하는 문을 나서면 계단이 나오는데 그리 내

차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강하게 단련되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적인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

“우리는 내 아들이나 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도 그들은 어딘가에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했지. 우리만으로는 안돼……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을 우리의 아들딸로 생각한다네.”

그 말씀 끝에 기어이 눈물을 흘리면서 황황히 자리를 뜨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조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떠올랐다.
남미의 실종자 조직으로 가장 큰 조직은 푸나피니해도 “FEDDEFAM”이다. 허무는 그 조직에서 심포지움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더니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오월광장의 어머니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서로의 입장이 달라 오월광장의 어머니들이 탈퇴했다고 했다. 오월의 어머니들은 결코 아들 딸의 죽음을 돈을 받고 해결할 수 없고, 사회의 변혁이 없이는 그들의 죽음은 온전하게 부인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있었던 반면 ‘FEDDEFAM’의 조직들은 정부에서 과거 실종을 인정하고 보상을 한다면 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있었다. 과거 인권유린을 자행한 학살자들이 새 정권 안에서도 권좌의 주변에 앉아 계속 학살을 자행하는 판에 우리는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용도 모르고 옷에 붙이고 다니던 FEDDEFAM의 스티커를 슬며시 떼어버렸다.

오월광장에 비해서 필리핀의 FINND는 실종자의 가족단체이긴 하지만, 이제 창립 3년을 넘긴 신생 조직이나 다름없다. 회원도 약 100명 가량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곳의 사무국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약혼자가 실종되어 다 죽어가는 걸 군부대까지 들어가서 죽음 직전에서 구해내기도 했다.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당시의 실종자가 750명이었는데, 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간정부라는 이키노 정권 하에서는 831명으로 늘었고, 라모스 정권에서도 실종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녀는 우리 상황을 설명하면서 열사들의 분신장면을 담은 사진을 보고

하지만 우리는, 특히 나와 같은 사람은 의교활동은 전혀 생각도 못한 것이었고, 오로지 우리와 연대할 수 있는 단체들을 찾아내어 서로 정보교환하는 정도에 만족하기로 하였다.

유기협을 대표하여 나간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의문사의 문제와 실종자 가족단체였다. 의문사에 대한 서명은 대회 기간 중에 주로 민간단체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525명의 서명을 받았다. 우리가 모범이 되었는지 그후 서명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차 늘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그처럼 고대했던 유권단체와의 만남도 주로 해외에서 온 동료들의 통역으로 만날 수 있었다. 그중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 어머니회’와 필리핀의 실종자 가족 단체인 FINND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했다.

먼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월광장 어머니회(Madres de Plaza de Mayo)’에서는 회장님과 또 한 분의 어머니, 전임 변호사, 이태리 출신의 아줌마 통역과 오스트리아 현지인 통역까지 합쳐서 다섯 명이 함께 움직였다. 그분들은 명성에 걸맞게 매우 바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어머니들은 우리 전시대에 걸친 사건들 중 특히 광주학살과 열사들의 죽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그 중에서도 유기협 어머니들이 합동추모제를 끝내고 울부짖으며 행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갖고 가고 싶어했다. 당신들과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의 모습에서 친근함을 느꼈던 탓이리라. 그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시는 곳은 다르고 처한 환경은 달라도 어느 곳이든 어머니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머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77년부터 실종된 아들, 딸과 남편, 머느리를 찾아 경찰서와 군부대를 떠돌아 헤매다가 처음 14명의 어머니들이 만났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당신들의 처지를 야담이나 단계를 찾아 호소했지만, 그 아무도 모습을 걸고 군사정권과 맞서 실종문제를 밝히려 하는 이가 없자 누구에게 기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직접 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 없이 어머니들은 유인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돌렸지만, 공포의 군사독재 하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도 사람들이 겁내어 받

는 매우 놀라는 표정이었다. 아무리 민주화나 인권이 중요해도 왜 스스로 몸을 태워 죽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난 이런 열사들의 죽음을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키기가 무척 힘들었다. 아무리 민주화나 자주통일이 중요해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면서 투쟁하는 예는 어느 나라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6월항쟁까지 싸운 일을 부러움에 찬 시선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학생 한 명 죽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기 때문이다.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한 동포는 자신의 경험을 말해 주었다. 몇 만 명의 군중이 시위를 해나가는데 시위대를 막는 병력은 겨우 1개 중대 밖에 안되더라는 것이었다. 저 인원으로 어떻게 시위 진압을 하려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되었는데 시위대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사격 자세를 취하더니 하늘에 대고 공포를 몇 번 쏘고는 그대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더라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도심지에서 총소리가 나도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총소리 나는 방향으로 달려가 구경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우리나라 투쟁의 역사 속에서 목숨 바쳐 싸운 열사들의 죽음은 국민들의 정치적인 인권의식을 가슴 속에 뿌리깊게 새겨 놓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치나천 생각일까? 분명 내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매우 높다. 반면에 정부가 국민들을 장악하고 있는 정도도 매우 높다. 우리나라 민중을 철지한 감시체계가 발달된 나라가 과연 몇 나라나 될까?

아젠티나 이들 두 조직을 만나서 많은 점을 들었지만, 우리와 공통된 사업으로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인적 청산(책임자 처벌)이 없이는 진정한 과거청산은 있을 수 없고, 반대급부적으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희생된 모든 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예회복이 없이는 진정한 민주정부일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돌아올 수 있었다.

한걸음에 접어든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이나 내 나이 또래의 필리핀 여성이나 우리는 한걸음 가는 ‘동지’라는 생각을 깊이 간직할 수 있었다.

아서는 버리고 해서 미사 전에 성당에 가서 성경책 간피 속에 유인물을 끼어 돌리고, 장바구니에 유인물을 담아 시장에 가서 나눠주고, 돈은 버리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화폐에 내 자식을 찾아 달라고 썼다고 한다. 아르헨티나에서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린 78년에는 정부에서 세계 각국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매우 좋다는 것을 국민적 차원에서 홍보하라고 주간지에 명단과 업서를 끼워 파는 것을 돈이 되는대로 사서 역으로 아르헨티나의 실종문제를 전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 당시 대회에서 준우승 한 네덜란드 팀이 수상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

한편, 대통령 중 앞의 5월광장에서의 시위가 게임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지고 다섯 명만 모여도 체포되는 상황에 직면해서는 원을 그리면서 한 사람씩 돌면서 경찰이 뭐라 하면 나는 혼자서 들고 있다고 말하기로 하였다. 결국 그 방식이 14·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것인데, 어머니들 중에 활동을 하던 중에 납치되어 실종된 분들도 계신다고 한다.

또 이 어머니들의 상징인 흰 머리수건의 유래를 보면,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천주교에서 매년 하는 성지 순례에 참석하는 방법이 좋을 듯한데(1회 행사에 약 10만명씩 참가) 감작스레 어디서 천주교 신자들의 미사포를 다 구한단 말인가.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어머니들은 이 때 에기를 가져키 천을 끊어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하여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상징인 흰 머리 수건은 등장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 수건에 내 자식의 이름을 쓰고, 내 아들을 찾아 달라고 썼지만, 투쟁을 통해 의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정치구호나 ‘오월광장 어머니회’로 아들의 이름을 대신했다.

그런 투쟁의 전통을 지닌 어머니들은 현재 아르헨티나에 19개의 지부에 8,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부대가 되었고, 그 중에는 ‘광장의 어머니’로 불리는 활동가 어머니들이 2,000명 가량, 아직 정치의식이 낮아 자식의 문제에만 관심을 쏟는 ‘실종자의 어머니’가 약 6,000명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 어머니들은 모든 일을 첫 출발부터 당신들의 힘으로 해결한다. 상근 변호사가 2명 있는데 이들은 법률구조 활동을 돕고 있다. 국제연대 사업조

비엔나 인권대회는 선언문 한 장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비록 본회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지만, 지구의 반을 차지하는 남쪽의 민간단체들이 이 회의의 계기로 새로운 연대들을 모색함으로써 서방 인권단체들에 취지우지 되던 민간인권단체들의 향방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 힘은 유엔의 정책에도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연대하여 국제회의에 조직적으로 참가한 우리 대표단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분명히 확인했듯이 인권운동에도 전략과 전술은 중요하다.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명백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국제무대에서 그 입장을 관철시키는 방법도 배워야 하며, 또한 전문적인 연구와 인권운동가의 육성, 대회 이후의 연대들의 건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일을 병기할 수 없게 되었다.

비엔나에서 돌아온 KONUCH 간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 또, 학살의 주범들을 정부는 계속 비호하고 있다.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에 '제3차 개입'이라는 명령을 다시 쏘우고 있다.

더 이상 인권운동의 실패는 모두에게 죄악이다. 정부에게 인권의 개선을 바라기 전에 우리들 스스로 찾지도 못하고 있는 인권은 없는가 다시 살펴 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

많은 민간단체들이 귀국한 뒤에 마지막 주는 대체로 한기했다. 사실상 우리처럼 대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대표도 보낼 수 없는 형편의 민간단체도 많다고 했다. 그들은 오히려 돈이 없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반면에 돈 밖에 없는 서양 쪽의 민간단체들은 돈으로 장난질을 쳤고, 한 나라 정부 쪽의 돈을 받아 먹고 움직이는 민간단체도 있었다.

민간단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었다. 순수한 운동적인 열정으로 참가한 나라의 민간단체들은 이런 내부의 불순한 단체들과도 마찰을 벌여야 했다.

사실 정부 쪽이 인권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마당에 민간단체라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이를 압력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 쪽 빼고는, 또 나름대로 노력한 남쪽의 단체들 말고는 영터리 민간단체들이 분위기를 늘 망쳐 놓았다. 그런 중에도 필리핀 형제들과 함께 우리 대표단은 늘 모범을 창출해냈다.

6월 22일 우리는 우리만의 문화행사를 기획했던 것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민간단체의 문화행사로 만들었다. 'Sound of Freedom'이라는 이 행사에 부간빌,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등의 나라들이 참가했다. 사실 이들 나라들 중 어느 나라는 독자적인 행사는 커녕 발언 한번 못해 본 나라도 많았다. 주로 자신의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노래, 춤, 연주 등을 선보였다. 이들 형제들은 너무도 좋아했다. 하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주최측이 장식하는 것. 한청련의 한 동지가 '망주천', '바겐세일', '저 창살에 햇살이'를 감동적으로 불러주던 후 까만 자고리에 흰 치마의 조선족 처녀의 연설과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형제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당한 이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함께 '그날이 오면'을 합창하니 분위기는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다. 슬라이드로 광주에서부터 투쟁하는 장면들이 생생히 비쳐지고 또 그런 후에 '담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니 모두 기립 박수를 보냈다. 열광적인 분위기에서 풍

물에 맞춰 참가자 전원이 원을 그리며 에루얼싸를 외치며 춤을 추는 모습은 너무도 즐거웠다.

이 행사 이후 우리는 어딜 가나 환대를 받았다. 자기네들이 먼저 와서 아는 체 했다. KONUCH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다.

이렇게 대회는 저물어갔다. 본회의는 예상대로 큰 결론없이 감문을박만 을 거듭하다 막을 내렸다. 구체적인 행동지침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그전에 논의되던 것의 확인 정도에 그친 것이었다.

NGO들은 대회 후의 연대에 대해 고민했다. 여러 논의 속에 6개월의 여유를 갖고 각 대륙별 연락체계를 꾸리기로 했다. 그걸 위해서는 각 국의 인권단체들의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었다.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3인의 대표중에 우리 대표단의 집행위원장이 선임되었고,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국가보안법, 식민지 문제, 개발과 인권에 관한 발언을 아시아 지역을 대표로 해서 발언하는 영광도 얻었다. 국제 무대에 첫 진출한 것치고는 많은 성과를 낸 것이다. 대신 우리에게 대한 기대도 읽을 수 있었다.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이념적인 중심을 상실하고 대체로 민간정부가 들어선 변화된 개량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는 길을 논 여기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나, 이번 대회를 통해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준 해외동포들의 모습은 참으로 감동이었다. 외국 땅에 살면서 조국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을 간직하고 고국에서 싸우는 동지들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더구나 조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쉽지 않은 임무를 철저히 지켜가며 조국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 그들이 기울이는 노력은 기하가상한 것이었다. 도리어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조직적인 규율과 헌신성, 국제연대의 원칙도 배웠다.

앞으로 그들은 이토록 갈망하는 조국의 운동하는 사람들과 보다 조직적인 연대를 원하고 있다. 미국 땅에서 조국을 그리는 그들의 순결한 바람이 있을진대 힘을 내이지 하는 각오가 첼로 생겨났다.

그러나 이번 대회가 거둔 것은 불행히도 아무 것도 없다. 아마도 세계인권에 한 장의 결의문만 남겼을 뿐, 새로운 세기의 시적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서 인류 역사에 도약의 한 다짐들을 놓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수천개의 인권단체, 수천명의 인권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이야기하고 교류를 논의하는 귀한 장소였던 것은 틀림없다. 특히 제3세계 인권단체들로서는 이번과 같이 자리를 함께 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해본 기회가 드물었다. 이러한 점에서라면 이번 회의는 국제적 인권운동과 논의의 새로운 단계와 시적을 알리는 소중한 자리가 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인권의 협한 역정에 이르지는 시지프스의 길은 이제 시작이었다. 냉전 해소 이후의 이른바 세계 신질서가 보여준 한계가 자명해진 것이다.

인권의 개념이 진인류적 차원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위장난 침략과 나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차세계대전은 전쟁과 그 참화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가져왔고 그 재앙의 방지를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전지구적 차원의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문이 없게 되었다. 유엔의 창설은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과학자의 과하도와 진정한 결집이 과하도야

인권의 개념이 진인류적 차원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위장난 침략과 나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2차세계대전은 전쟁과 그 참화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가져왔고 그 재앙의 방지를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전지구적 차원의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이문이 없게 되었다. 유엔의 창설은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빈 세계인권대회 참관기

人權의 험한역정, 이제 시작일 뿐

세계인권대회를 구상한 유엔총회의 의도는 이번 대회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인류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국제장치의 마련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朴元淳(박원순)

『자, 모두 반으로!』 이것은 어느 국제인권단체의 지난 5월 호의 판 뉴스레터가 달고 있는 표기사의 제목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수천명의 정부대표, 인권전문가, 학생자들이 세계인권대회가 열리는 빈의 공황을 비추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이 지구상에 시 인간이 다른 인간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부정당해 온 현실을 개혁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그들 모두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을 것이다. 지난 1968년 테헤란에서 열린 지실로 25년 만에 세계인권대회가 열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화려하고 기나긴 말의 성찬이었다. 모두가 인권을 이야기하

기의 경험을 반성적 고려에서 검토하여 새로운 인간의 질서를 확고히 수립한다는 의무적 목표를 세웠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파형 거듭된 비정부단체 포럼

원래 정부간의 본회의는 6월14일부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한편 비정부단체들의 이른바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포럼」은 그에 앞서 6월10일부터 12일까지 회의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공통의 문제를 논의하고 집약된 의사를 정부간 회의에 전달하여 최종 결의문에 반영되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 비정부단체 포럼의 목적이었다.

이 공식적인 두 행사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비정부단체들은 자국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인권침해의 보편적 현상에 관하여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토론했고, 문화행사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회의의 전기간을 통하여 유감시포지엄, 트리부날, 이벤트가 회의장 곳곳에서 계속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 국가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의 양상이 속속들이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원주민의 권리 등 주제별, 법률가와 인권, 의사와 인권, 교사와 인권 등 직업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부간 조직예컨대, 유엔이나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와 비정부단체의 관계는 국제인권활동에서 비늘과 실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특정국가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토의와 결의, 심의를 하는 것은 정부간 조직이지만 이들의 활동에 그 해당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 보고고 발하는 비정부단체의 고유한 기능이 없다. 이런 정부간 조직의 권능은 사실상 무력해지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비정부단체의 역할은 인정하고 그들의 체제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 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자격(consultative status)을 획득한 비정부단체들로 하여금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여하여 그 단체들의 진상보고, 의견제진을 허용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1992년 비정부단체포럼의 준비를 위하여 합동기회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 조직은 평소 제네바와 뉴욕에 위치한 국제인권 비정부단체들의 상설기구인 콩고(CONGO) 인권위원회,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루트비히 볼트만 인권연구소,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 및 중미,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회의에서 결성된 각 지역 조정위원회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미 참석이 예정된 1백40여명의 아프리카 비정부단체 가운데서 약속한 재정지원의 지연으로 40~50여개 단체만이 참석하게 된 소동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기니, 이 공동기회위원회의 잘못된 단순화 절차적인 실수를 넘어 서서 계속되었다. 이번 회의의 기본원칙이 하나는 개별국가의 인권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

체들의 불만이 회의 비누부터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25년 만에 열린 세계인권대회

유엔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인간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1990년 열린 유엔 총회에서 1993년에 세계인권대회를 열 것을 확정하였고 그 기본 의제로 다음과 같은 6개 항목을 채택하였다.

1. 1948년의 인류사의 기념비적인 세계인권선언 발효 이후 인권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반영,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
2. 시민,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문화적 권리의 향유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상호 관련성을 탐구한다.
3. 현존하는 유엔의 각종 인권규약 및 제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한다.
4. 유엔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인권관계제도와 관행의 효율성을 재평가한다.
5. 유엔산하 인권활동과 인권관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다.
6. 유엔산하 인권활동을 위해 적절한 재정 및 기타 지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권고한다.

권규약 등 관련조약들을 비준하고 이 조약들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라.

4.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보안 관련법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 연구, 시정할 특별소위원회나 특별보고자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정신대체제의회에서도 여러 종류의 회의와 세미나를 조직하거나 참여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인다. 장대협에서는 세계적인 여성운동단체들이 조직한 트리부년에 정신대참마니탈 증언대에 참석시키 세계적 양산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이 정도로 자만한 시정이 아님은 물론이다. 조직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앞섰지만 실제 국제인권대회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거의 발모지인 상태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자국의 인권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나라와 세계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운동단체들로서 「아시아 외국 인노동자 포럼」 「한국인권그룹」(Korean Rights Group Japan) 「동-티모르 지원그룹」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인권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들의 상당수가 이번 대회에도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대문제에 관한 세미나에 이들 양심적인 일본 인권단체들과 지식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토론하고 지휘하는 모습

여성동아

보람있는여성의회 단원개강의 길잡이

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기도 하였다. 일본 변호사연합회에서는 회장을 비롯한 대표도 대표단이 참석하여 유엔에 보내는 결의문에 동참하였고, 아사히신문의 한 편집위원은 시종일관 이 회의를 취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언론은 이 대회에 소름끼칠 만큼 무관심하였다. 한송부장관을 따라온 기자 2~3명이 감시 들렸다는 소문만 들릴 뿐 특별한 한 사람 회의장에 보이지 않았다. 인류 전체에게 있어서나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현실에 대해 자각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의 언론은 눈감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민간단체의 대표라고 하여 몇명이 「조선인민협회」 등의 간판을 달고 나왔지만 전혀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북한에서 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거나 인권의 실상을 소개한 만한 단체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한국보다 훨씬 먼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고 지난 70년대 이후 한국의 국내 인권상황의 국제적 비판활동에 열심이던 북한이 이제 한국의 인권상황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수세적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앵네스티 인터내셔널, 아시아위시 등에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이겠다는 담당자들의 견해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다.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북한의 인권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단계가 된 것이다. □

한국정부는 한송주의무정권을 대표로 하여 이시영, 오스트리아에서, 유송하 유엔대사, 신유남 인권대사 등 대사관 해도 3명용 교체대표로 파견했다. 이외에도 정상권 강수림의원이 자문역으로 참석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과거에 없던 인권대사를 새로이 임명하여 국제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정부가 인권문제에 큰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적 역할을 담당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디 그뿐인가. 한국정부대표는 방콕 회의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특수상황, 예컨대 저개발 등이 인권침해에 대한 변경이나 정당화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를 통하여 개발독재를 내세웠던 권위주의적 정부의 인권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인권고등판무관 제도의 도입을 지지하고 유엔의 기존 인권제도의 개선과 강화에 동의함으로써 서방선진국의 입장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한송부장관이 선언했듯이 과연 한국에서 인권이 성숙했으며 민주주의가 승리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노태우 전대통령의 「5.16」 기념대 거창극집에 서는 것은 대 입기 중에 민주주의를 완성한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긴다는 고별 인터뷰 내용이었다고 믿는다.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민주주의를 완성했던 적이 있었는가.

그러면 김영삼정부는 어떠한가. 개혁과 민주화가 마치 모두 성취된 것인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자아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단언컨대, 이제 우리는 겨우 민주주의와 인권의 출발점에서 서 있을 뿐이다. 과거의 악법과 악습의 유산을 얼마나 청산했는가? 우리의 주위에 아직 도 권력때문에 고통받고 사회적 편견과 빈곤, 차별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있는가.

인권대사를 임명하여 국내 인권상황을 홍보하고 국제인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 같이 인권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된 인권청, 또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설치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현재 있는 법무부 내의 인권과 검사 및 명으로 인권문제를 대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눈을 돌려보면 과거의 정치적 이유로 인한 폄박에서부터 일반 시민의 인권과 장애자 여성 소비자 어린이 등 차별의 폐지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계층, 분리가 얼마나 많은가. 유엔차로센터, 각 대학에 인권화과를 설치하는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 우리의 비극적인 과거를 잊고 서방선진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다면 그것은 제2의 미국, 제2의 일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우리가 지나쳐온 그 고통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과 저개발국에 대한 배려와 입장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

으면 안된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상이 이미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야명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강준에 그치지 않고 개발에 대한 자개발국가들의 권리를 중시하여 세계경제질서의 개혁과 개발지원책의 모색에 연대의 입장을 보이게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 민간단체의 활동

한국이 이제 유엔과 세계무대에서 인권에 관한 새로운 차원을 열기 시작하였다는 포하나의 증거는 대규모의 민간단체들이 참가와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에서도 찾아진다. 비정부인권단체들의 숫

자와 활력은 그 나라 인권상황과 수준에 비례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의 비정부인권단체들은 민변,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가협, 천주교 인권위원회, 불교 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으로 구성된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번 대회에서 매우 활발하고 인상적인 활동을 보였다. 이 위원회는: 아시아지역에서 국가정보원 이유모 한 기본권의 취해가 보편적이거나 이러한 법제가 인권침해의 주범이라는 현실에 착안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여러나라를 묶어 세미나를 조직, 주도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서 이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십개 인권단체의 서명을 받아 다음과 같은 항목이 들어 있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데 성공하였다.

1. 각국 정부는 국가보안 관련법류에 의한 구속자를 즉시 전원 석방하라. 또한 자의적 체포, 불법구금,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 국가정보원 이용으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즉각 중지하라.

2. 각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집행을 담당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된 특별정보사찰기구나 특별법원, 특별형사절차를 폐지하라. 최소한 그러한 기관들을 엄격한 법의 통제를 받게 하라.

3. 각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최소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개정하라.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

● 자양강장 ● 육체피로 ● 허약체질

젠, 힘있게-젠

500ml

의약품
● 1일 1병 (50ml) 복용
■ 표준소매가: 1,650원